

코로나에 후보 검증 미약...부동층 행배가 승부 가른다

유권자 무관심·분위기 위축...최악 감감이 선거 우려
감염병 방역 성과·위성정당 논란이 총선판 좌우할듯

4·15총선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아 이들의 행배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를 맞은 이날 각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지역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만나기가 힘들어졌다. 일부 유권자를 제외하면 거리에 인적이 드물고 전통시장마저 방문객을 손으로 꼽을 정도다.

총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대외변에 걸린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예전처럼 선거운동원들이 로고송을 크게 틀어놓고 율동을 하는 모습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시민들 역시 선거 유세 차량 근처에 모여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연설을 듣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심지어 거리에 개척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조차 관심을 갖고 보는 이가 드물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는 관세에 변화를 가져올 현장 바람 물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19가 선거 이슈를 모두 뺐아들었다는 불넨 소리만 나온다. 게다가 관세를 가능할 민심의 경청조차 어려워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나 정당들로서는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밝힌 부동층이 20%를 훨씬 상회하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까지 더해진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속에 확실한 제3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 막판까지 부동층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4·15총선 선거인수는 4천399만4천247명으로 4년 전(4천210만398명)보다 4.5%(189만3천849명) 늘었다. 여기에서 전체 4분의 1가량을 부동층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1천1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표심을 얻기 전까지는 선거 승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후보, 어느 당을 지지할지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행배는 이번 총선에서 막판 관세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당 구도가 견고해지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8명이 6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합동으로 정책 공약 발표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두 당이 아닌 '제3대'로 흐를지 각 당은 내부 관세 분석을 통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른바 '사이 보수'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텅 반영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통합당은 사이 보수층을

전체 유권자의 4~8%로 추정하면서 특히 경합지역에서 이들이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이 보수'의 규모가 실제로는 미미하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은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사이 보수론'으로 반박했고, 민주당에서도 사이 보수가 10% 인파에 이를 것

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투표함을 열자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심겁게 끝났기 때문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여야의 선거 전략은 물론 투표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총선 관세를 뒤흔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석 기자

4·15총선 전남지역 투표소 864곳 확정

전남도선관위, 별도 사전투표소 297곳도 마련...안내문 발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소 864곳·사전투표소 297곳 등 도내 투표소 1천161곳을 확정했다.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투표소는 모두 1층에 있거나 2층 이상인 경우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했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와 다른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한다.

또 이날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와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또 도내 87만5천810가구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발송했다.

허성은 기자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 방안 찾는다

빛그린산단서 올해 첫 모임
한노총 불참선언 대책 논의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1차 회의가 9일 오후 2시 광주 빛그린 산단 내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열린다. 회의 장소가 대변하듯 회청거

리는 사업 추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일 협약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5명 중 노동계 인사는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부의장 2명,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모두 4명이다.

노동계가 빠진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공장 건설과 근로자를 위한 공동복지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 구체적인 노사 상생 모델 구축을 위

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논의가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연구 용역은 지난해 1월 31일 체결한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가 '상호 협력' 등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협정 이행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한국노총의 공방이 벌어진 데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열린 노정협의회에서 노동계는 협정서 이행을 위한 용역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에서는 노사 상생 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노사 상생 구현 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최영범 기자

4월7일 신문의 날 휴무로 8일자 신문 쉽니다..9일자 정상 발행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